

투데이칼럼

태풍, 그리고 산업현장의 안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의 작업자와 설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산업 현장 안전관리자와 경영진,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태풍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풍이 물고 오는 강풍과 폭우는 건설현장의 크레인, 임시 가설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고소작업이나 옥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낙하물이나 붕괴된 구조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고정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김용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부장

시 고정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는 산업현장 내 침수 및 홍수 피해를 가져온다.

지하 시설, 저장 공간, 전기 설비 등이 침수될 경우 기계 고장과 전기 사고는 물론, 심각한 감전 사고와 질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침수된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며,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태풍이 예상될 때 산업현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한 예방과 대피'다.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 모두가 비상 연락망과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 설비에 대한 방수 조치, 임시 구조물 해체, 배수

펌프 점검 등 사전 대비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태풍 전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이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심과 준비 부족으로 큰 피해가 반복된다. "이번에도 무사할 것이다"라는 낙관은 위험을 키울 뿐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기후와 맞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태풍이 가져올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

사설

연금 '모수개혁' 큰 틀 합의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다. 일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라는 큰 틀의 모수개혁 안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치권에선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와 맞물려 다른 민생 현안과 함께 밀려날 우려도 나온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해 국민의힘 안인 '43%'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역시 가시밭길이다.

여야는 이번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위 구성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특위 구성이 불발될 경우 '모수개혁' 다음 스텝인 '구조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에선 모수개혁 안부터 먼저 처리한 후 구조개혁을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나머지 쟁점인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수개혁마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민생 현안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선 일부 민생 현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태우는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채납의 문제

보통 아파트 등의 건설을 허가받거나 건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다. 하지만 기준 없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이 시급하다.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 측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러한 부담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관련 규정이 없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다. 영어로는 contributed acceptance라고 한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과적에 따른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재를 만들 재원이 부족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변질됐다. 보통 아파트 등의 건설을 허가받거나 건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바트얌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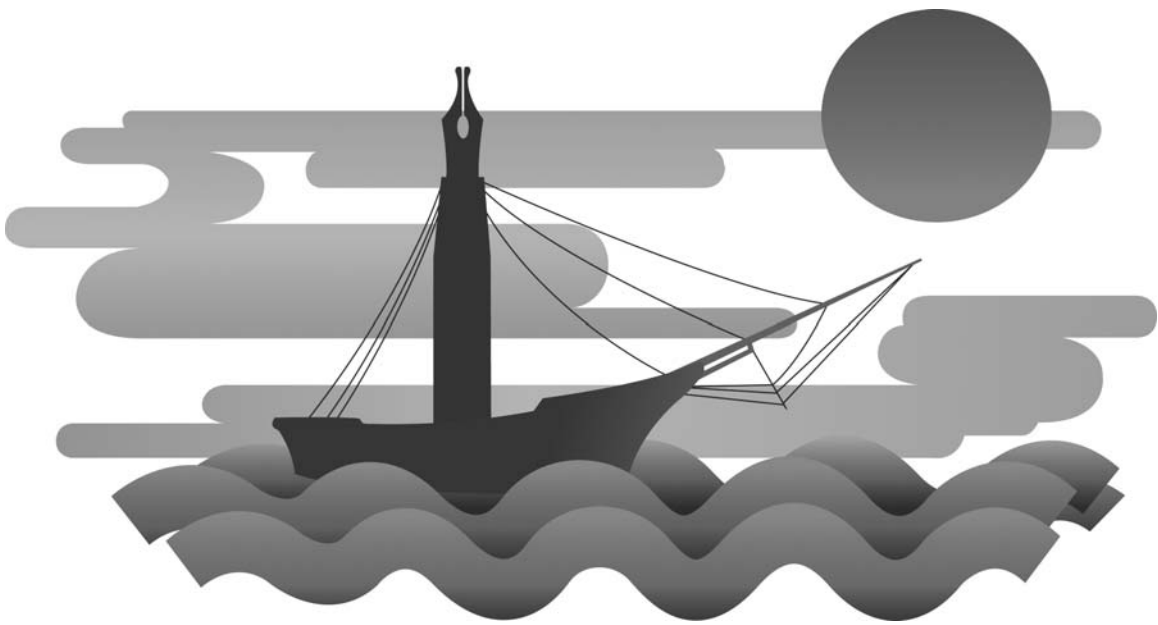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1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중부 바트얌의 한 건물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이스라엘 국영 KTNV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에 달한다.

인도 푸네 인근 교량 붕괴, 2명 죽고 32명 부상



15일(현지 시간) 인도 푸네 인근 인드라니강의 철제 다리가 무너져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지 관리는 이 교량 붕괴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